

# 우리 학문과 대학의 역할

이 기 흥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 1. 머리말

이 글은 우리 학문체계와 대학의 역할을 검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필자의 전공이 사회학인 까닭에 논의 영역을 사회과학 분야에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한에 대하여 한 가지 변명을 한다면, 자연과학의 경우 그 대상이 대체로 동일한 것이어서(예컨대 한국에서의 소립자나 미생물이 유럽에서의 그것과 다를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구태여 '우리' 학문이라고 논의 영역을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한국의 자연과학 발전 수준이 다른 나라의 그것과 차이를 보인다면 그것 또한 검토할 가치가 있는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차이에 관해서라면,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차이에 관한 논의로부터 유추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

학 분야에 관해서는 '우리' 학문의 독자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역량 부족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인문학의 경우 '우리' 학문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야에 관한 한 그 학문상황은 사회과학보다 훨씬 양호 또는 우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역시 사회과학에 관한 논의로부터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 2. 학문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 학문과 대학의 역할을 검토하려는 이 글의 주제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주제와 이 질문을 연결짓는다면 다음과 같다. '우리' 학문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정의가 있다면, 이 글은 간단히 그것을 열심히 연마하는 것이 지식생산장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이라고 결론짓

고 논의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학문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여러 가지 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학문이 무엇인가를 규정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 학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먼저 학문 일반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부터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학문에 대해서는 '방법과 체계를 갖춘 지식 또는 그런 지식을 연구하는 일'이라고 정의내리더라도 크게 다른 의견은 없을 것이다. 또 방법과 체계를 갖춘 지식은 흔히 '과학'으로도 불리는데, 근래에는 이 두 용어가 별다른 수정 없이 서로 바뀌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그 체계와 방법이 무엇인가를 따지게 되면 또 여러 상이한 견해들이 다투게 되겠지만, 이것에 관해서는 그 폭을 넓혀 다양한 견해들을 모두 포괄하면 될 것이다.

폭을 넓히기 위해 최소한으로 이야기한다면, 방법을 갖춘 지식이라는 말은, 학문이 그것의 획득과정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지식에 한정됨을 의미한다. 학문에서의 지식 주장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확인될 때 비로소 지식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그 지식 주장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획득과정을 공유할 수 없는 개인적인 이념이나 종교적인 신념 등은 학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체계를 갖춘 지식이라는 말은, 학문이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된 지식에 한정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편적인 사실의 나열에 대해서는 그것이 참인 사실들일지라도 과학이나 학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겠다. 또 예술활동의 산물도 그것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학문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이렇게 느슨하게 정의내린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의 대학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지식 가운데 학문의 범주 밖에 위치하는 것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추측된다. 그렇지만 학문의 특성에 관한 논의에서 이러한 인지적 측면과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

근래의 과학사회학적 작업들은 학문 활동에는 이러한 인지적 요소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사회적 요소도 개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식 생산자로서의 학문 연구자들은, 일정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 존재하며 활동한다. 따라서 그들의 학문 활동은 그 맥락 속에서 그들이 배양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능력과 그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인지적 자원 및 물질적 자원의 활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좀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아무리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적절한 훈련을 통하여 연구능력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훌륭한 연구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페이어벤드 같은 과학철학자는 이 훈련이 오히려 학문연구자의 창의적인 발상과 연구를 질식시킨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훈련과정을 통하여 학문의 방법이나 체계를 습득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할 것은 아니다. 특히 특정의 인지적 자원들을 공유하는 이른바 학파 형성에서는 이 훈련과정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적어둘 만하다.

또 아무리 훌륭한 연구자라도 물질적인 도구와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의 능력을 펼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구와 자원의 배분이 순수하게 학문적인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다. 그것의 배분을 담당하는 사람들과의 친분관계가 좀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흔히 확인되는 사실이다.

게다가 학문활동의 이러한 사회적 성격은 종종 그것의 인지적 측면들을 강하게 제약하기도 한다. 어떤 연구자들은 구조기능주의적 접근을 택하고, 어떤 연구자들은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택하는 것을, 단순히 그 접근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현상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선택에는 오히려 그 연구자의 훈련 과정과 도구 및 자원의 획득 상황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어떤 지식의 우열에 대한 판단에도 이러한 사회적 요인은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큰 학문연구의 모태인 '패러다임'의 교체가 각각의 패러다임의 인지적 우월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유하고 따르는 연구자(공동체)의 힘에 의해 좌우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학문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줄일 수 있겠다. 연구자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언어, 개념, 논리적 범주, 절차, 규칙 등 사회적으로 형성되어온 인식활동의 도구와 자원을 획득하고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문에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인과 조건이 개입하여 인지적 요소와 결합된다.

이렇게 학문활동이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들어 학문의 가치를 부인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사회적 성격이 학문의 인지적 가치를 훼손시킨다고 성급하게 추정할 필요는 없겠다. 어떤 지식이든지 그 지식은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문의 인지적 가치는, 그 학문 활동의 주체가 누구인가와 무관하게, 그 활동에 의해 생산된 지식과 그 지식의 대상 사이의 일치관계로부터 확보되는 것이다. 이른바 진리상응이론이 말하는 '객관성'은 이 일치관계를 가리킨다.

이때 이 일치관계를 일 대 일(1:1)의 대응관계로 상정하는 것은 단순 소박한 사고이다. 객관적 진리라고 하면 종종 사람들은 지식의 내용이 그 대상과 100% 일치하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아마도 그 대상과 100% 일치하는 지식은 아직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물질의 기본 단위에 관한 자연과학적 지식은 분자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원자에 관한 지식으로 그리고 소립자에 관한 지식으로 진전되어 왔다. 또 그것에 의해 인간은 물질의 기본 단위에 대하여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말하자면 지식은 발전해 왔다. 물론 이 발전이 단선적인 누적과정을 보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앞으로 그리고 때로는 뒤로 가기도 하면서 발전해 왔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얼마나 더 알아내야 할 것인가조차 알지 못할 만큼 많은 것들이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러므로 '객관적 진리'라고 하더라도 대상에 대하여 일부만을 알아낸, 그리고 그런 뜻에서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일치관계에 있는 지식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들어 이른바 협약주의 과학철학자들 가운데에는 지식의 내용과 그 대상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급진적이고 회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지식에 대한 인간의 판단과 선호는 오로지 그것의 유용성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할 수는 있어도, 유용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는 평범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주장이 크게 설득력을 갖지는 못한다. 학문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발견은 오히려 지식의 객관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진리에 접근하는 학문이 인간의 활동으로서 불완전하며 역사적으로 제약된 지식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준다고 하겠다.

정리하면, 학문은 활동의 주체와 대상으로 구성되며, 또한 주체의 활동에 의해 생산된 '사회적 생산물'로서의 지식은 주체와 구분되어 대상과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일치관계를 맺는, 3위1체적 형태를 갖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그리고 체계와 방법을 갖춘 지식(추구 활동)으로서의 학문은,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인지적 측면과 함께 사회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측면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학문이란 무엇인가를 검토할 때는 마땅히 이 두 측면 각각 그리고 이 두 측면의 연관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3. '우리' 학문이란 무엇인가

이제 논의의 초점을 학문 일반으로부터 '우리' 학문으로 좁혀보자. 도대체 '우리' 학문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학문 활동의 대상이 '우리' — 민족이거나 국민이거나 영토이거나 — 라는 말인가, 아니면 주체가 '우리'라는 말인가. '우리' 학자가 예컨대 '스웨덴의 자동차 산업'이나 '라틴 아메리카의 노동운동'을 연구하더라도 그 결실은 '우리' 학문으로 평가되고,

또 외국에서의 이른바 '한국학'을 '우리' 학문으로 부르지는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우리'라는 경계가 학문의 대상에 의해서 그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학문에 대한 논의는 학문 활동의 주체인 '우리'의 연구자들을 중심에 놓게 된다.

우선 방법과 체계라는 학문의 보편적 특징으로부터 출발하겠다. '우리' 학문이라고 해서 그 보편성을 이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방법과 체계에 대한 '서구적 기준'을 보편적 기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우리'에게 타당한 논리와 절차는 서구의 그것과 다르며, 따라서 우리에게 고유한 방법과 체계를 갖는 것이 우리 학문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논리적으로 해독하고 판단하기 어렵거나, 어떻게 알아내었는지 납득하고 공감하기 어려운 지식이라면, 설사 그것이 '우리'의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학문'으로 대접받을 수는 없겠다.

그것이 '서구'에서 근대 계몽주의 이후에 더 뚜렷하게 발전해 왔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경험적 증거와 합리적 추론은 '학문'의 기초로서의 경험과 이성을 사용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논리적 체계에 관해서도 형식논리학이나 좀더 확대하여 변증법적 논리학은 명확한 사유의 틀로서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게다가 이미 우리도 50년 이상 또는 100년 가까이 '서구'의 방법과 논리를 배우고 사용해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유한 방법과 논리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벗어난, 사변과 궤변이라 하면 더 이상 '학문'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여기서 우리 학문은 무엇인가의 문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학문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학문을 '지식 생산 활동'으로 이해하면, 이 생산활동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구분해낼 수 있을 것이다. 휘틀리라는 과학사회학자에 따르면, 학문활동은 연구 대상, 절차와 기술, 설명모델, 일반적 목적, 형이상학적 요소 등을 구성요소로 갖는다. 연구자는 이런 요소들을 결합시킴으로써 자신의 학문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물론 이 요소들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활동 속에서 유기적으로 통합 연관된 채 스며들어 있다.

예컨대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는 그 연구 대상으로부터 연구자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연구의 대상은, 그것을 인식하고 사유 속에 재구성하는 도구인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을 체계있게 질서짓는 이론적 틀, 그리고 좀더 포괄적인 세계관이나 형이상학적 전제 위에서 그리고 이 전제로부터 배태되는 연구의 목적에 입각하여, 연구할 문제로 포착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는 그 문제에 대하여 답하는 연구의 절차와 방법도 규정하며 연구 결과의 표현까지도 안내한다. 그러므로 이들 요소 각각이 정교화된 정도와, 이들 요소가 상호 관련되고 통합되는 정도가 학문활동의 구조와 발전 정도를 일정하게 규정짓는다.

이제 문제는 '우리' 학문을 구성하는 요소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으로 세부화된다. '우리' 학문이라면, 우리의 연구자들이 이런 요소들을 결합시키는 연구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 학문은 무엇인가의 문제는 다시 '우리'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학문의 구성요소가 어떤 것인가

의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런 요소는 진공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형성되고 획득되고 공유되고 이용되며 발전되는 것이다. 위에서 학문활동이 사회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장황하게 이야기한 까닭도 여기 있다.

우리를 규정지어 온 역사적·사회적 맥락은 식민지 및 '근대화'의 상황이었으며, 학문 연구자들도 이 상황에서 조금도 자유롭지 못하였다. 연구자들은 오히려 이 상황에 더 탁월하게 적응하며 살아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여기서는 논의의 경제를 위해 다소간 비약적으로 전개하겠다. 식민지 시대의 특징적인 상황인식은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이며, '근대화' 시대의 지배적인 상황인식은 선진과 후진(이것은 근대와 전통과 동치된다)의 이분법이다. 그리고 지배적인 가치는 야만 또는 후진으로부터 문명과 선진으로의 전환이다. '우리' 학문 연구자들에게서도 이러한 가치는 그대로 관철되어, '선진' 학문의 수용과 적용의 추구로 나타난다. '우리' 연구자의 혼란이 거의 전적으로 '혜의 유학'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역설적인 상황은 이러한 가치의 집약적 표현인 셈이다. 그리고 '토착화'란 이 가치를 정당화하는 구호라 하겠다.

그런데 학문 활동은 특정의 사회적·역사적 조건 속에서 수행되며, 그 조건은 학문활동의 구성요소를 일정하게 규정한다. 예컨대 미국의 경제학은 문제의식의 형성, 연구 대상의 포착, 연구 절차와 기법, 추상화 및 개념화 과정, 이론화의 초점 등에서 그것의 배경인 미국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에 의해 일정하게 규정된다. 또 일반적인 형이상학적 요소에서도 그

곳의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이 깊이 작용한다. 이 점은 학문의 분과나 학문이 생성되는 국가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이다. 즉, 학문의 구성요소는 그것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조건들을 일정하게 반영한다.

그리고 학문이 이런 요소의 상호작용과 유기적 통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선진' 학문을 수용할 때에는 이런 요소가 구분되지 않은 채 통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설사 이런 사실을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학문에 사용되는 개념이나 범주, 기법, 절차 등에서조차 이미 사회적·역사적 조건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에서 그 구성요소들을 분해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실제에서는 아무런 각성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았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외국의 역사적 사회 현실로부터 형성된 문제의식, 연구 대상, 개념들, 연구 절차와 기법, 이론의 초점, 형이상학적 배경 등의 요소들이 '우리' 학문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역사적 사회 현실과 학문의 내용은 상당히 괴리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학문이라는 사회적 생산 활동은 동시에 그 생산물로서의 지식의 내용이 그 대상과의 일치 관계라는 인지적 측면에 의해 평가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 대상과 괴리되어 일치관계가 희박한 학문이라면 인지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토착화' 논의가 늘 '현실 적합성'에 관한 논의를 수반해왔던 사실은 '우리' 학문의 이러한 사정을 간명하게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정이 빚어낸 양상을 몇 가지 살펴보자. 흔히 '우리' 학문에는 학과가 없다고 말한다. 앞에 언급했듯 학과의 형성에는 한편으

로는 사회적 요인과 다른 한편으로는 공유되는 인지적 요인이 결합되어 작용해야 한다. 그런데 인지적 요인은 외국에서 학습하여 수입해 온 것이며, 연구자들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의 중심점은 외국에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우리' 연구자들을 학과로 묶을 요인은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이 점은 근래 해외 유학으로부터 돌아온 연구자가 많아지면서, 필자가 속한 사회학계에는 '동문수학한' 연구자들끼리 연구에서 협동하면서 위스콘신 학과, 하버드 학과 등으로 이름할 수 있는 학문적 흐름이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서도 반증된다.

또 우리 학문에서는 '우리' 연구자의 업적에 대한 인용과 검토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상이한 훈련기관으로부터 상이한 인지적 자원을 습득한 연구자들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나 접근 방법은 물론 피차 의사소통에서 적잖은 장애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연구자의 업적보다도, 외국 연구자의 친숙한 인지적 자원을 사용하는 연구업적에 훨씬 더 경도된다. 물론 외국 연구자의 업적이 '선진적인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제가정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적 사회 현실로부터 추상화 개념화 정식화된 것이 아닌 구성요소들을 결합시킨 학문은 '우리' 현실에 대한 적합성이 취약하다는 점도 적어두어야 할 것이다.

이 사정이 낳은 더 위태스러운 양상은 우리 학문에서 '연구'와 '학습'이 혼동되고 있는 점이다. 외국의 '선진' (?) 학문을 습득하는 일은 '우리' 학문에겐, 인지적 자원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학습이 곧 연구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학습을 통하여 획득된 인지적 자원과 도구를 효과적으로 분해하여 이용할 때 비로소 연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선진' 학자 아무개의 학문 내용은 이런 것이라는 '학습'의 소개가 연구를 참칭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 학문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 것을 두루 고려해 보면 '우리' 학문은 50년의 연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물론 '우리' 학문이 무엇이어서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자명해졌을 것이다. 모든 학문이 역사적·사회적 조건의 규정을 받는다는 말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 연구자가 생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 사회 현실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포착하고 그것을 개념화하고 이론화할 때 '우리' 학문은 비로소 그 이름에 값할 것이다.

이것을 두고 학문의 쇄국주의나 국수주의라고 힐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오히려 시체말로 학문의 '세계화'를 옹호한다. '우리'의 역사적 사회 현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적절한 학문이라면, 그것이 어디서 생산된 것인가를 묻지 않고 부지런히 습득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이것은 '토착화'로서의 선진 학문의 수용과 적용이 아니라, 분해되어 '우리'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 영역을 포착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인지적 자원으로 응용되는, 말하자면 '이론화'의 요소로서의 활용이다.

이 이야기는 또 '우리' 학문이 우리의 역사적 사회 현실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필자는 '우리' 학문이 그 대상에서도 '세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또는 구주연합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아프리카 오지의 부족에 대해서도 '우리' 연구자들은 연구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연구라 하더라도 우리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조건의 규정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그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역사와 사회와 문화를 풍성하게 살지우는 데 기여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런 뜻에서 '우리' 학문으로 자리매김되는 것이다.

#### 4. 대학은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학은 학문 연구를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치이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학문이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의 대학이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좀 심하게 말한다면 학문 연구가 대학의 본령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과연 지금까지 우리의 대학이 잊지 않고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우리의 160여 개의 대학들은 모두 '학문의 요람'을 참칭한다. 그렇지만 이른바 명문대학에 몸담고 있는 연구자들조차, 아니 그들이 더욱, 학문 연구보다는 '정책 연구'에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왜곡 과장일 것인가?

물론 이것은 이른바 '연구비'라는 학문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적 자원의 배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그리고 1960~80년대의 개발

연대를 거치면서 심화되어 온 현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개발도상국을 ‘졸업’하고, 남산의 경관을 개선하는 데 3천억 안팎의 돈을 아깝지 않게 사용할 만한 국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학문 연구’에도 연구비가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필요한 만큼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여전히 학문 연구에 대한 홀대가 두드러지지만, 대학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 이런 현실이 변화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생각은 과감하게, 행동은 조심스럽게’ 하라고 했던가? 대학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입만 열면, 연구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인력적 지원을 확보 또는 확대하라거나, 학과 이기심의 산물인 자의적인 학문분과 구분을 없애라거나, 대학원을 확충발전시키라거나, 연구와 강의를 연결시키라거나, 심지어는 연구하지 않는 교수는 도태시키라거나 등등 대학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구실을 할 것인가를 설파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 변화될 수 없는 까닭이 있음에 틀림없다. 이런저런 과감한 생각이 있지만, 그것은 이야기 해보아야 또다시 공염불

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에 몸담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두 가지 실행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한 가지는 학문 연구에서 늘 현실로부터 출발하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이라는 것은 그냥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이론적 전제에 입각해서만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불충분하고 부정확하다. 현실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인 고려는 언제나 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늘 기존의 학문 연구의 성과를 통하여 인지적 자원으로로서의 이론적 전제를 획득하거나 강화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 성과에 접할 때는, 그것이 ‘선진’의 것이든지, ‘우리’의 것이든지, 늘 위에 말한 그것의 구성 요소들을 분해하여 검토하자는 것이다. ■

---

이기홍/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충남대, 전남대 강사를 지내고, 현재는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맑스의 역사적 유물론의 과학적 방법과 구조”, “행위, 행위주체 그리고 구조”, “진보적 사회학의 위상과 과제”, “시민사회론을 위하여”, “신식민지 지배체제와 사회과학 연구” 외 다수를 발표했다.